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갖고 싶은 장난감을 손에 쥐기만 해도, 가고 싶던 놀이 공원에 받을 들어가만 해도 더없이 즐겁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살아온 연수가 더해지고 걸쳐진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마냥 유쾌하고 기쁘기만 한 일은 점차 드물어진다. 근래 들어서 유쾌하다, 기쁘다는 말을 입에 올리거나 귀로 들어온 기억도 흐릿하다. 사회·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서, 아니 그보다도 다들 당장의 민생고로 인한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먹고 살기 훨씬 더 팍팍했을 조선시대, 참으로 유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일쾌사(一快事)'라고 표현하곤 했다. 박사호는 힘겨운 사행 길에 침심한 하나로 중 국인 아이의 마음을 사서 잠시 빠른 말로 바꿔 타고는, 고삐를 당겨 광활한 요동 벌판을 전속력으로 마음껏 달려 본 일을 '일쾌사'라고 적었다. 이덕무는 농부가 봄비 내리는 새벽에 왼손으로 쟁기 잡고 오른손으로 고삐를 쥐고서 검은 소의 등을 때리며 산이 무너지듯, 물이 소용돌이치듯 찌렁찌렁 소리를 지르자 검은 소가 밭갈음을 날리며 부드러운 흙을 구름 덩어리처럼, 물고기 비늘처럼 가볍게 착착 갈아 제치는 장면을 두고, 세상에 둘도 없음을 일쾌사라고 했다.

‘일쾌사’, 참으로 유쾌하고 기쁜 일

정약용이 71세 되던 해에 지은 '노인일쾌사'라는 시는 요즘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된다. 늙어서 대머리가 되니 감고 빗질할 일 없어 일쾌사고, 이가 다 빠지니 평생 괴롭히던 치통이 없어져서 일쾌사며, 눈이 어두워 지니 잔글씨 주석에 얽매일 필요 없어 일쾌사고, 귀가 안 들리니 헛된 시비와 평판에 신경 쓸 일 없어 일쾌사 라는 등의 내용이다. 노쇠한 신체를 해학으로 받아들이는 시를 읽으며, 꼭 유쾌하고 기쁜 일이 있어야만 유쾌하고 기쁜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조경에게 준 글에서 이규상은 세 가지 일쾌사를 말했다. 조정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 봄날 햇살 드는 창가 아래나 맑은 밤 깊은 서재에 단들이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시를 주고받는 그 시간이야말로 일쾌사가 아닐 수 없다.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관료로서 공을 세워 역사에 나란히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당연히 일쾌사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깊은 산골 서로 가까운 곳에 초가를 짓고 살며 꽃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마다 대지팡이에 짚신 끌고 오가며 숲 한잔의 풍류를 즐기는 것, 그 또한 일쾌사다. 이규상은 맑은 마음으로 욕심을 줄일 때 일쾌사를 얻을 수 있는 법이라며,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박사호의 일쾌사는 시원스러우면서 소박하고, 이덕무의 일쾌사 역시 맑디맑은 마음에 들어오는 풍정이며, 정약용의 일쾌사야말로 욕심

을 초탈한 경지에서 만날 수 있는 여유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 데서 그친다면 식상하다. 정말 그저 주어 진 현실에 만족하여 살아가면 마냥 유쾌하고 기쁜 일들이 다시 넘치게 될까? 이규상의 글을 받은 조경은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방 면에서 공을 세우고 우의정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 규상 본인은 끝내 급제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 지냈다. 어릴 적 가까웠던 친구라 해도 처지가 이렇게 달라 지면 소원해질 법도 한데 둘의 우정은 이후로도 평생 지속되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규상은 세 가지 일쾌사를 말하고 나서 이런 단서를 달아 두었다. “그렇더라도 우리 둘의 지향과 학업에 나날이 새로운 진전이 없다면 이 일쾌사라는 게 그저 한때의 감정 과 기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를 어찌 군자의 일쾌사 라고 하겠는가?” 인생의 길이 달랐음에도 이규상과 조 경이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후로도 이 단계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 힘겨운 시대지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이 있다. 나아가 스트레스와 콤플렉스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세운 지향과 이상을 온전히 견지하며 그로 인한 기쁨을 온전히 즐길 수 있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면과 지향을 다시 돌아볼 일이다.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일쾌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社說

지자체는 재정난인데 여야 정치권은 정쟁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3년 연속 지각 처리를 앞두고 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서로 '내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세수 급감으로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한 민생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유탄을 맞게 됐다는데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지역화폐와 세만금사업 관련 예산, R&D(연구·개발) 예산, 원전 및 재생 에너지 예산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시한내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이른바 '쌍륙검' 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극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감 백신 가격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니

독감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예방 백신 접종 비용이 광주지역 병원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해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정보 자료에 따르면 4일 현재 광주의 평균 독감백신 가격은 3만 3616원, 전남은 3만 7143원이다. 하지만, 광주 병·의원은 같은 종류 백신 가격을 최대 두 배까지 더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녹십자 '지씨플루' 백신을 접종하는 서구의 한 의원은 2만 5000원의 접종비를 받고 있으나, 북구의 한 의원은 5만 원을 요구했다. 동구의 한 병원은 3만 5000원을, 서구의 한 의원은 4만 5000원을 요구하는 등 접종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또다른 백신인 '비알플루백 I 테트라 백신주'의 경우 광산구의 대형병원은 4만 원의 접종비를 받고 있는데 비해 같은 구의 다른 병원은 2만 5000원을 받는다. 독감백신 가격 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이어서 병원마다 백신을 사들여 접종하다보니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물가 상승으로 백신 원가를 올린 것도 접종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의료계는 "계약사에서 약제를 구입하는 원가에 세금,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일정 이상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병·의원들의 경영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백신가격 책정에서 수요 공급의 시장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더구나 같은 종류의 백신 접종 가격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폭리를 의심하게 한다. 백신 접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 요구하는 등 접종 비용이 천차만별이 된다. 또다른 백신인 '비알플루백 I 테트라 백신주'의 경우 광산구의 대형병원은 4만 원의 접종비를 받고 있는데 비해 같은 구의 다른 병원은 2만 5000원을 받는다. 독감백신 가격 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꿈꾸는 2040

갈등 중재자 없는 노란봉투법



조선익 위민연구원 이사·공인노무사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전달하는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약 15억원을 모금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액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기 위해서 생긴 이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개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사관계가 대부분인 탓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노동조합의 헌법상 근로 3권의 상대방으로 보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에 기능성 분업과 계약관계의 다변화로 간접 고용이 확대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 이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사용자 개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었으며, 202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성에 대한 분쟁이 상

당수 차지하는 문제로 국회의장에게 사용자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하청 사업주에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권이 사실상 없고 원청에서 지급한 도급비에 의존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은 하청 사업주만을 상대로는 한계점이 있고, 자본주의 성숙으로 우리나라도 소위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선진국 병(病)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업주 사이의 집단적 노사 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방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시키면서 지속적인 갈등을 낳고 있다. 노사가 경제사회와 조직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만 주장할 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주장과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우리나라 노사문화에서는 협력적, 합리적 노사관계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에게 공동 불법행위자 책임을 지우기 보다는 조합원 개별적 책임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인 사용자의 구제방법도 부족해 보

인다. 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합리적인 법률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여당과 야당, 행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기 보다는 서로의 정치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제시할 뿐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협력적, 중립적 입장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서 한쪽은 노측 편에서 한쪽은 사측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과 행정부의 역할이 아닐뿐더러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협력적, 중립적 입장에서 현실적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정치인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언젠가는 현재의 모습이든, 다른 모습이든 노란봉투법은 개정되어 시행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제도의 시행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목적과 우연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

국민 물 복지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남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수도지원센터장

정든 마을, 우리의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인적 자원과 사회적 투자 대부분이 서울로 향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힘이 빠지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52%인 118곳이 소멸위험 지역에 속한다. 전남을 비롯한 전북, 강원, 경북 지역 등은 소멸 위험 지역의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에 속하는 지역은 인구 감소라는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본 인프라와 행정 서비스 품질 하락을 가져온다. 열악해지는 생활 환경은 다시 인구 유출을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위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단초를 만들고 있다.

K-water 또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생활이 편안하도록 물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방에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려면 일단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여행으로 하루를 머물더라도 수도, 전기와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불편함 없이 제공돼야 다시 찾아가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K-water는 지역별 급수 불균형 해소를 집중하고 있다. 지방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21개 시·군의 물 사용량 중 62%(전남지역 인구의 약 42% 수준)에 해당하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K-water 영·섬유역본부는 상수도 보급이 열악한 도서 산간 지역의 급수 불안정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물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상수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바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물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현산면 일원과 고흥군 계마마을 일대 주민에게 고품질의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제

공함으로 물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암댐과 장흥댐 간 광역상수도 시설을 연계하여 물 흐름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완도군과 협력해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를 통해 완도군 일부 도서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상시 가뭄 지역인 완도군 보길도 및 노화도 지역의 영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용수 공급체계 구축사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저관로 9.2km를 비롯한 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정책과 노력을 펼쳐야 한다. K-water는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급격한 기후변화 등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서 산간까지 물 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하게 상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안정적인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더 나은 지방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한다.

無等鼓

1.5도.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참가국들은 금세기 말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른바 파리의 약속, '파리 협정'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엔산하 기구인 기후변화예측관련정부간협의체(IPCC)가 내놓은 리포트에서 설정한 목표치까지 0.1도만 남겨둔 상태로 발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펴낸 '2023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대로면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가 섭씨 2.5~2.9도 올라 지구 온난화가 한계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등 논의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전남도가 5년 뒤 열리는 'COP33'을 여수에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세계인과 '연안생태계 중심의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길, 정부도 적극 거들어야 하지 않겠나. 엑스포 유치 참패의 무능함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지구온도 1.5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내선 222-4918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정·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경영지원실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